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한광일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경찰은 무엇으로 시는가 이상원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특집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실태와 향후전망 치안정책연구소 송경호 연구관
교통정보 제공실태와 교통예보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연구관

치안정책동향

Cooperative ITS 워크숍 참관기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연구관
경찰청·ITOTA 공동 주최의 '국제 대테러 컨퍼런스' 치안정책연구소 최경환 연구관

치안현장탐구

이제는 시민이 대테러 안전활동의 주역이 되어야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계장
이임걸 경정

입법·판례동향

2012. 1.~2. 국내외 입법 및 판례 소개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듯이, 인간과 사회는 그 존재를 같이 해 왔다. 국가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함께 사는 인간의 사회에는 질서가 존재하여 왔고, 그 질서의 시원에는 물리적 강제력이 보루가 되어 왔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작용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와 역사를 함께 한다. 경찰은 태고시대부터 사회구성원을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 경찰은 해방 후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 대한민국 탄생의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2012년 서울의 거리는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한 도시여서 한 잔 술에 거나한 취객이 되어도 집에 가는 길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만 같은 그러한 안전 뒤에는, 폭폭 찌는 더운 여름날이건 살을 에는 찬바람의 겨울밤이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여 온 어머니 같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있다.

그런데 2011년 봄 특임장관실이 전국 성인 남녀 201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신뢰받고 있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2.9%만이 경찰이라고 대답하여 경찰이 신뢰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왜 국민들은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경찰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맞닥뜨리는 물리적 강제력이 속성인 국가권력이다. 칼은 아무리 잘 써도 배이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분노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경찰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한 일제시대 이래 통치의 수단으로 기능한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어느 새 경찰에 대한 저항과 정의의 실현 사이에 이미지 착종 현상을 가져온 면이 없지 않다.

경찰의 본질적 속성에 더하여 우리 대한민국 경찰만이 가지는 원죄적 멍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원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들은 쉽사리 믿어주지 않는다.

지난 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화두로 몸서리를 쳤다.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보조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공은 가로채어지고 고생은 떠맡아 온 것이 너무도 억울하였다. 그래서 목청껏 외쳤다.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였다.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묻자 공자가 이르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국민의 신뢰는 최후까지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국가나 그 국가의 기능을 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설 수가 없다.

철권통치는 무섭다. 국민들이 두려워 질서를 지킨다. 효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의 주체는 왕으로부터 귀족으로, 귀족으로부터 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어느 독점된 권력도, 어느 독점된 권력의 하수인도 시민의 권력을 막지는 못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을 탄생시킨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최근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은 우연히 발생한 특별한 사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드러난 예들일 뿐이다.

경찰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만이 존재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그 힘은 사라지고 만다. 자신을 베는 칼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그래서 국민은 그 칼의 쓰임에 대하여 더욱 예민하게 바라본다. 조금이라도 잘못 쓰이거나 조금이라도 과도하게 쓰이는 칼은 전적으로 불신을 받는다. 불신받는 칼은 곧 칼이 아니게 된다. 국민은 그 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그 힘을 사용할 때에는 행여 누구라도 다치지 않을까, 행여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이런 면에서 근자에 경찰이 인권센터를 활성화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경찰이 스스로 자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다시 경찰에게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권력을 탐하면 권력이 도망간다. 권력을 멀리하면 권력이 찾아온다.

2012년은 특별히 중요한 해이다. 이제 곧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4월에는 총선이,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이와 같은 큰 행사에는 공정하고도 완벽한 안전과 질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이는 바로 경찰이다.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자랑스런 우리 경찰의 이마에 맺혀지는 땀방울이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리라고.

그 땀방울이 군림의 땀방울이 아니라 봉사의 땀방울이 되어 우리 경찰이 깊어진 원죄마저 깨끗이 씻고 국민의 사랑을 가져올 것이라고. [PSI](#)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판사 (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현)

- [저서]
- 로스쿨 형법총론 (공저)
- 로스쿨 형법각론 (공저)
- 로스쿨 형사소송법 (공저)
-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공저)
- 법률가의 맥 - 형법각론

■ 책임연구과제 요약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실태와 향후 전망

송 경 호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부자간의 권력세습은 어떤 이념과 체제를 막론하고 봉건적인 시대착오로 배척하고 있으며 왕조국가를 제외하고는 3대에 걸친 부자 권력세습은 자본주의 국가든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의 권력세습은 김정일의 강력한 지원과 다양한 정치적 조작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화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3대 후계세습 배경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후계체제 추진양상을 전망하였다.

김정은 권력세습의 배경

북한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배경에는 김정일 사후 격하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체제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김정일의 정치적 욕구에서 출발되었다. 더구나 김정은만이 가장 안정되고 믿음직한 후계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판단 하에 후계자 논리를 교리로 체계화하여 김정은 후계지위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후계자론은 수령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혁명 승계론, 세대 교체론, 혈통 승계론, 역사적 준비 단계론, 김정일 신화론을 담고 있으며 김정은만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체현한 사상과 영도의 천재,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며 수령의 화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3대 후계체제 구축실태

북한은 2007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와 매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을 통해 김정은 권력세습을 은밀하게 추진하여 왔다.

첫째, 김정은 후계자 옹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① 김정일의 지시(2009.1.8)로 후계자 결정사항을 하달하고 김정은 찬양가(발걸음)를 보급(2009.2~6)했다. ② 김정은에 대한 호칭(영도자, 당 중앙, 청년대장 등)을 부여하고 생일날을 임시 휴무일(일부 지역)로 지정하는 한편 전국적 축하행사(2010.1.7) 및 김정은과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는 개명조치(2010.2.17)하였다. ③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하고 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을 통해 군부의 충성맹세를 거행하였으며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가 김정은에게 직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④ 혁명위업 축적은 김정은을 혁명전통의 계승자로 내세우고 대규모적인 국가 기념행사를 비롯한 국책사업의 성과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김정은을 군사 분야의 천재로, 문화 예술적 재능의 소유자로 부각시켰다. 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먼저 가계를 우상화하고 생가 복원, 찬양노래 보급, 호칭 부여, 생일을 휴무일로 제정하였다.

둘째,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있어 미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 조치하였다.

① 헌법을 개정(2009.4.9)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제100조)로 내세우고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최고통치기관으로 격상시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주석과 같은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대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법문화하였다. 또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2010.9.28)하였다.

② 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정일을 당 규약 전면에서 등장시키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채택했다.

셋째, 김정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김일성 일가의 친인척 및 당과 군부, 최고인민회의, 내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①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대대적으로 교체 [당 중앙위원회 위원 124명 중 84명(68%), 후보위원 105명 중 98명(93%)] 하여 김정은 후계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군부에서는 이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 정치국 제1부국장, 최부일 부총참모장, 김명국 작전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담당부국장, 김영철 경찰총국장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결집시켜 왔다.

③ 당 및 정권기관에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우동축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최룡해 당 비서, 문경덕 당 비서, 김양진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당 비서, 강석주 정치 위원, 박정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명수 인민보안부장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김일성 일가의 친인척으로는 양형섭, 강석주, 이용무, 김달현 등이 후계체제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노력동원 운동 및 과학기술혁신운동에서 발굴한 신진관료들이 향후 김정은 체제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권력 세습을 반동적 제도라고 부정하면서도 김정은 후계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부자세습체제의 모순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령론’에 입각한 ‘후계자론’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성공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김정은 사전권력이양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봉건시대의 신분논리를 탈피하지 못한 자가당착의 논리에 불과하다.

향후 후계체제 추진 양상은 2012년 태양절을 전후하여 강성대국 및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을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고 국가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당 총비서 승계는 김정일 3년 상 이후 이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권력 상층부의 권력투쟁으로 체제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당과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될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현숙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신동욱, 이춘삼,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620-2804 (경비) 61-2804

• e-mail: webmaster@psi.go.kr

맺음말

■ 책임연구과제 요약

교통정보 제공실태와 교통예보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 남 선 책임연구관/교통공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교통대책연구실

서론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통예보분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착시점의 여행정보제공과 미래의 교통예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며 이동교통류를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속보제공을 통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미래시점 교통관리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예보를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보를 연계·통합관리하고, 미래시점 교통상황에 대해 교통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측정보를 생성하고 예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도입단계이며 혼잡도 개선, 에너지 절감, 공해배출 감소, 도시생활의 쾌적성 향상 등 정책적인 목적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무선통신시스템, 데이터마이닝 엔진, 교통모델과 알고리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 API 및 서비스플랫폼 등 매우 많은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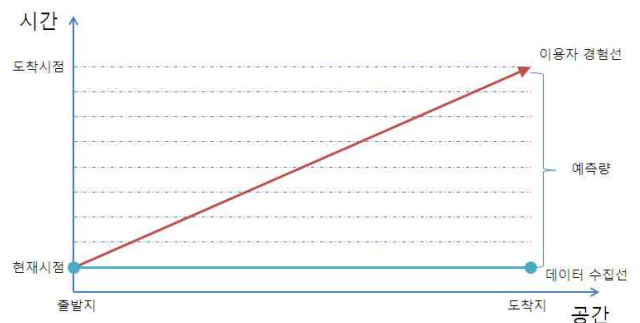
이용자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조회를 통해 한산한 시간과 경로를 택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분산효과는 물론 도시생활의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교통예보시스템은 실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좋은 신규 교통서비스 분야이며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은 교통류 특성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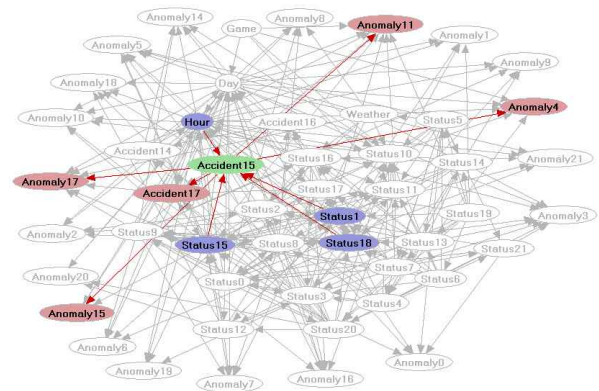
이론, 통행시간 추정 및 예측, 이력자료 패턴 추출, 자료수집과 이용시점간의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시간에 대한 데이터 변환기법 등의 기반이 필요하다.

<그림 1> 자료수집시점과 이용시점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워싱턴주(Washingt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DOT)에서 수행된 Prediction, Expectation, and Surprise: Methods, Designs, and Study of a Deployed Traffic Forecasting Service가 있다(2005년). 사례에서 미래상황은 미래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은 미래예측 모델에 의해 도출된다.

<그림 2> 30분후의 미래예측모델



교통예보 제공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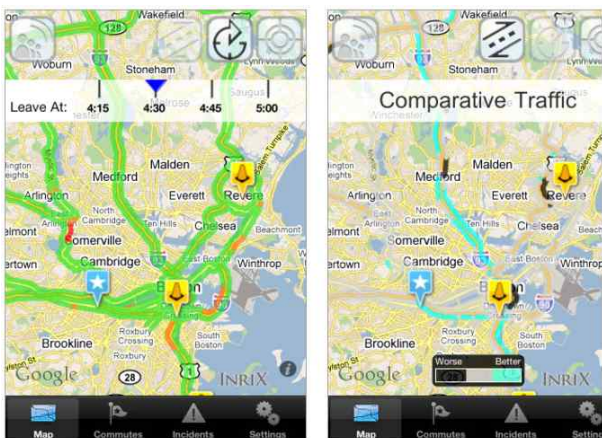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예보를 명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OASIS시스템'의 이력자료를 기반으로 주말교통예측 및 설날, 추석 등 특송기간에 대한 예측정보를 자체보도 및 언론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교통예보지원시스템 종합차트



외국의 경우 미국 INRIX Traffic사의 상업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무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INRIX Inc.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 및 예보제공 사례로써 언어는 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INRIX Traffic은 실시간 교통사고, 미래시점의 15분 단위의 교통상황예측 및 경로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미국 INRIX사의 교통예보 앱(App)



교통예보시스템 도입방안

○ 교통예보시스템 도입시 고려사항

교통예보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몇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확실하고 비정형적인 교통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교통상황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예보시스템은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의 자료융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통예보시스템의 제공서비스는 교통지수예보, 주행전 도착시점기준 여행시간, 주행중 위치기반(LBS) 돌발상황 교통속보, 등록경로에 대한 돌발상황예보, 도로기상 상황예보 등 실현가능한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 교통예보서비스의 내용

교통예보시스템의 제공서비스는 전체적으로 교통지수 예보, 여행시간 예보, 돌발상황 예보, 도로상태 예보서비스로 구성된다.

첫째, 교통지수 예보서비스는 교통상황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과거이력자료에 의한 시간별, 요일별, 월별, 계절별 교통상태와 교통사고, 교통통제, 공사, 행사, 기상상태 등 교통영향변수를 종합하여 지역적, 전국적인 교통지수를 산출·예보한다.

둘째, 여행시간 예보서비스는 출발 전, 주행중 경로검색에 대하여 미래 도착시점 기준의 여행시간을 산출하여 예보하며 주행 중에도 도착시점 기준으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셋째, 돌발상황 예보서비스는 교통사고, 교통통제, 공사, 행사 등을 현재상황과 지속시간,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여 위치기반(LBS) 및 미래 이용자 경로기반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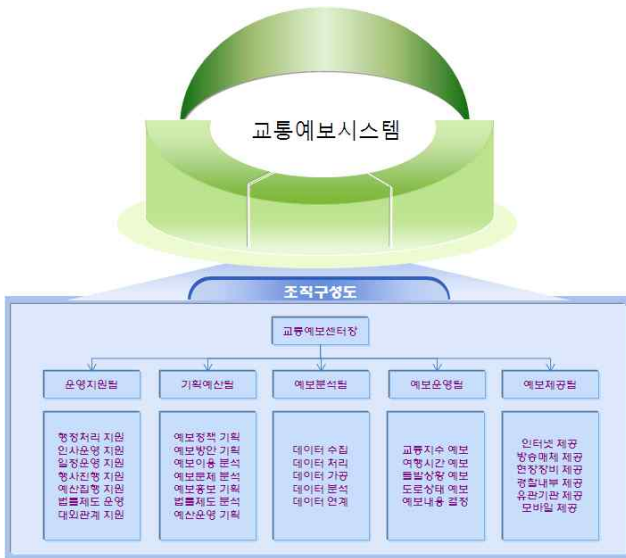
넷째, 도로상태 예보서비스는 도로의 기하구

조 및 제한속도를 중심으로 도로노후상태, 침수상태, 결빙상태, 안전상태,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 **교통예보서비스를 위한 조직구성**

교통예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교통예보센터장을 중심으로 운영지원팀, 기획예산팀, 예보분석팀, 예보운영팀, 예보제공팀으로써,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교통예보에 필요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용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교통예보시스템 조직구성도



○ **서비스의 구성**

교통예보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정보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최적의 경로로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통예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와 출퇴근 전 교통예보 알람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통비서와 같은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은 제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사용될 기반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공서비스와 기반기술

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기반기술
교통지수 예보	• 시간/일/주간/특정일의 교통지수 산출	• 교통이력자료 패턴인식기술 • 교통영향요인 가중치 산정 기술
여행시간 예보	• 이용자 경로산정 • 소요시간 산정	• 과거이력자료 패턴인식기술 • 이상자료 검출기술 • 이상치, 결측치 보정기술 • 실시간 수집자료 융합기술 • 링크별 대표값 산출기술 • 링크별 대표값 예측기술 • 경로산정기술 • 소요시간 산정기술
도로상태 예보	• 검색경로상 도로상태 파악	• 기하구조 파악기술 • 노후상태 파악기술 • 침수상태 파악기술 • 결빙상태 파악기술 • 안전상태 파악기술 • 기상영향 파악기술
돌발상황 예보	• 검색경로상 돌발상황 영향산출	• 교통사고 영향산출기술 • 교통통제 영향산출기술 • 도로공사 영향산출기술 • 도로행사 영향산출기술

○ **교통예보시스템의 단계별 추진전략**

- **준비단계** : 기반조성 및 사업계획 수립

• 기반조성단계로써 이용자 요구사항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

• 교통예보를 위한 핵심 연구 진행

• 교통예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1단계** : 단위영역 시범사업 실시단계

• 초기시작단계로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 경찰청이 주체가 되는 서비스 중심으로 시스템 구현

• 기술이 검증되고 효과가 큰 단위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선정

- **2단계** : 수도권 권역사업 실시단계

• 성장, 확산단계로써 정보제공은 주요 간선 도로 및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영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2단계에서 검증된 단위서비스를 위주로 제공서비스 선정

-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권역 사업 실시설계 추진
- 3단계 : 전국사업 실시단계
- 성숙·고급화 단계로써 2단계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국사업으로 확대
- 기 제공한 단위서비스를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교통여건에 따라 개선·보완
- 이용자 요구사항변화 및 세부에 기반한 고급서비스의 확대

<표 2> 교통예보시스템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	목표	사업범위
준비단계	기반조성 및 사업계획 수립	내부진행
1단계	시범사업단계	단위영역
2단계	성장·확산단계	수도권
3단계	성숙·고급화 단계	전국권

<그림 6> 교통예보시스템 개발 로드맵



마치며

교통예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줄여서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교통량의 분산에 있다. 이는 교통혼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시간적 분산은 차량들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여러 경로로 배분되도록 교통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교통정보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예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교통예보를 위한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교통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개발·구축하여야 한다.
- 교통예보용 이력관리시스템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교통예보를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통정보는 현재의 교통정보가 아닌, 미래의 교통정보이다. 교통예보시스템은 이런 관점에서 이용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부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교통예보시스템을 통한 교통예보실시”는 국민을 위한 경찰의 교통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선진화서비스로서 정책적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26호 당첨자 : 윤병건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 참 관 기

Cooperative ITS 워크숍 참관기

김남선 책임연구관/교통공학박사



지난 2월 9일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한국ITS학회 주관으로 ‘Cooperative ITS(이하, C-ITS)’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학·관에서 50여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긴장과 기대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최근 국제동향은 국가/지역 간 MOU체결 및 협력회의를 통해 연구프로젝트 및 국제표준화의 공동추진 등 이다. 미국은 Connected Vehicle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근 유럽과 ITS서비스, 법제도 측면에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ITS통신기술인 WAVE통신을 C-ITS의 표준 통신방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역시 국가별로 CVIS, Safe Spot, Coppers, Drive C2X프로젝트 등 연구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해 비교적 오랜 기간 C-ITS를 준비해 왔다. 일본은 그동안 C-ITS 분야에는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해 작년 말 미국-일본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C-ITS 기술개발현황 및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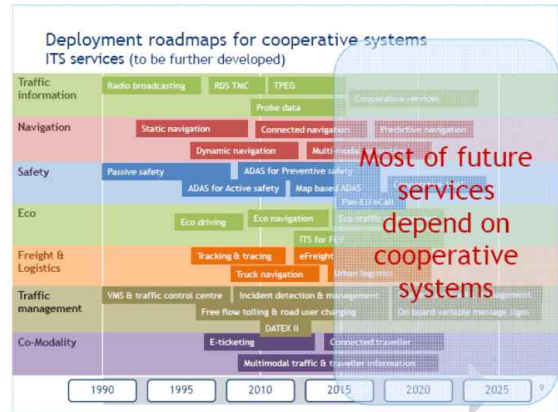
Session 1 : C-ITS 기술전망

-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전략
- C-ITS 기본개념 및 국제동향
- 자동차기술의 발전전망

Session 2 : C-ITS 기술개발현황

- C-ITS 통신기술 개발현황
-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현황
- 차량정보 응용서비스 개발현황
- C-ITS 활성화 방안 패널토의

<그림 1> C-ITS Deployment Roadmaps



C-ITS는 사람과 차량, 차량과 도로인프라, 인프라와 센터 간 접속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성, 이동성, 환경성을 목표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C-ITS의 영향을 예상해 보면 2015년 이후에는 교통서비스의 대부분이 C-ITS에 의존하게 되고, 통신방식도 Peer to Peer(P2P)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부상시켜 교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은 급변하고 있는 C-ITS 교통분야의 세계적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적절한 대응이다. 우리는 아직도 ‘C-ITS’라는 용어조차도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여서 개념정립과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이 시급하다. 작금에 이르러서야 관련학회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학술적인 접근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C-ITS의 이해와 적극적인 추진방향을 고민할 시기이다. [PSI](#)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특집

경찰청 · ITOTA 공동 주최의 ‘국제 대테러 컨퍼런스’

최 경 환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찰청과 ITOTA(International Tactical Officers Training Association, 국제전술경찰 훈련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 대테러 컨퍼런스’가 지난 2월 8-9일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ITOTA는 대테러전술·장비정보 교류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관련 경찰관·특수부대원 등 주로 유럽·미주 38,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현재 캐빈 바렛이 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 대테러 컨퍼런스’는 세계 최고 대테러 전문가 초빙, 대테러 전략·전술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와 합동 교육훈련 실시, 대테러 노하우·정보 공유 및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외사·정보·핵안보·경비의 T/F팀의 실무회의를 거쳐 계획되었고, 군·해경 대테러부대 요원, 관련 전문가 등 836명이 참석한 대규모 대회였다. ITOTA측에서는 주요인사 및 훈련교관 등 53명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에 경찰청 차장, 경비국장, 핵안보 단장,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비롯하여, 대테러 담당 및 특공대 요원,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군 대테러부대, 테러학회원 등이 참석하여 대



테러 장비 전시를 관람하고, 또한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ITOTA의 회장인 캐빈 바렛은 “새로운 대테러 전략과 법집

행 훈련”이라는 주제로 개회식에 이어 발표하였다. 이어서 '02년 G8 통합정보그룹장, '10년 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부국장 수석운영 책임자였던 캐나다 경찰청(RCMP) Mike Sekela 총경이 ‘대형국제행사시 지휘·통제와 안전’에 대해 주제발표하였다.

컨퍼런스는 1분과 ‘대테러 지휘·리더십’에 대해, 2분과 ‘대테러전술’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분야별로 참여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실제적으로 대비하는 실무요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질문 공세와 답변으로 쉬는 시간까지 계속되기도 하였다. 특히 다중통로개척과 관련한 성공과 실패사례를 비교한 동영상 자료는 많은 감동을 주었고, ITOTA 참가자들도 우리나라의 통로개척 역량과 전략에 대해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1분과 : 대테러 지휘 및 리더십

- 리더십(Augie K. Babela, 에어원 비상대응연합팀장)
- 인간정보전지휘(John Coots, 미 특수부대 에어본 예비역)
- 견프로그래밍 및 통합공격(Kenneth Licklider, 미 공군 예비역 상사)
- 테러범 법집행 정책(John Plasse, 미 테르오프경찰청장)
- 전술지휘소 운영(Ronald Pastino 팀장(경사), 미 뉴욕주경찰청)
- 테러사건 위기관리(Michael Masters, 미 쿡카운티 전위기관리과장)
- IED 집중공격 대응(Chirstian Christenson, 미 LAPD 폭발물팀)
- 균형있는 리더십(Raymond Hamilton, 쿡카운티 국토안보부 부국장)

2분과 : 대테러 전술

- 인질구출(Gerald Wienckowski 경사, 미 뉴욕주 특수 대응팀)
- 저격작전 지휘 및 훈련(Antony Slater, 영국군 예비역 준위)
- 통로개척 역량 및 전략(손병철 교수, 중앙경찰학교 경비정보학과장)
- 근접전 다중통로개척포인트(Matthew Sekela, 캐나다 밴쿠버특공대 팀장)
- 해상작전(John Beltran, 미 해군해군 SEAL 예비역)
- 전원지역 작전(Bryan Jang, 미 국토안보부 특수요원)
- EOD 통합공격 대응(Andy Fayal, 미 해군 EOD팀 예비역)
- 전술피해 관리(Ralph Cruz 경사, 시카고 경찰청)



컨퍼런스는 선진 대테러전술을 수용하고, 대테러부대의 국제화·전문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ITOTA와의 교류훈련 정례화로 대테러 분야 외연 확대 및 경찰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50여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준비태세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시의 적절한 기회였다. [PSI](#)

- ‘현장제언’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핵안보정상회의

-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 추진배경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
-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 2010년 4. 12.(월) ~ 13.(화)
 - 장소: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 3개 국제 및 지역기구(UN, EU, IAEA)가 참가함
 - 회의목표
 - 1) 정상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2) 핵안보 관련 최적관행 공유
 - 3) 핵안보 강화 및 핵테러 대응에 있어 국가책임인식
 - 4) 핵안보 관련 기존의 국제적 노력지지 및 강화
 - 논의내용: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방안
- [제2차]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3. 26.(월) ~ 27.(화)
 - 참가대상국: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한 53개국, 4개 국제 및 지역기구(UN, Interpol, IAEA, EU)
 - 주요 아젠다
 - 1)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 2)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 3)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oulnss.go.kr>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특집

이제는 시민이 대테러 안전활동의 주역이 되어야

이 임 걸 경정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계장

테러 경향의 변화

평소 우리에게 테러란 말은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최근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 테러청정국가로 불리기 때문일 것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일주일 전에 김포공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외국인 테러조직원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통 폭탄테러 이후 국내에서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 1996년 잠수함 침투, 1999년과 2002년의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그 총책이 징역 9년형의 선고를 받은 지하당 ‘왕재산’과 같이 간첩단을 운영하면서, 국내 핵심산업기술을 빼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에너지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을 파괴하여 남한의 혼란을 획책하려 하기까지 했다. 탈북자를 협박하거나 포섭하여 간첩활동을 하게 하거나 지난해 10월의 보수단체 대표 독침기도와 같은 유사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위장탈북자와 간첩조직이 정치·산업·사회·군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고, 이들이 유사시에 남한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사(아시아경제, 2011.12.28)와 같이 이들에 의한 도발의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우리 아국인이 종종 테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2009년 예멘에서 한국관광객 4명이 자살폭탄테러를 당한 것을 비롯해 20건 내외의 테러피해를 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테러사건이 급증해 2001년 460여건에서 2007년 3,400여건을 정점으로 3천여건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의 테러는 잘 알려진 테러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고 매우 선택적이며 차별적으로 그들의 적대감을 대표하는 정치인 등의 인물이나 대사관 등 주요시설을 목표로 하였다. 1990년대 이후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테러 기조가 등장했다. 1995년의 움진리교 사린가스 살포, 2001년 9.11테러, 2011년 노르웨이 우퇴야섬 총기난사 등 이제는 드러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극적이고 대규모 살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사로잡고 대중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테러가 진화하고 있다(이황우, 테러리즘, 법문사, 2010, 396~414면 참조). 특히, 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와 같이 수많은 인파의 유동이 있고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지하철, 열차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는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0여건에 불과하던 교통시설에 대한 테러사건이 지난해에는 120여건이나 발생했다.

한편, 테러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사건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매년 1~2건씩의 사제폭발물 사건이 발생해 오다 지난해에는 5건이나 발생했으며,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에서는 폭죽을 이용한 사제폭발물로 다가구주택 통로 유리창 여러 장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로 원한관계나 경제적 이득 등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사건들로 그들의 목적이나 대상이 변한다면 바로 심각한 테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핵안보 정상회의 전후의 테러발생 전망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식량난 타개를 위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와 영양지원 문제에 상당한 접근을 하는 등 북한이 정상회의 기간에 무력도발 등을 벌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문화일보, 2012.2.24., 35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과 같이 2월초에 황해도 해주 해안포 포문을 열고 단는 훈련을 반복한 것을 볼 때,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해 한·미 양국의 키리졸브 연습기간인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도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도 있다(이데일리, 2012.2.11).

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핵물질이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소련의 핵연구소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이 공공연하게 거래되었다. 당시 플루토늄 2kg을 불법거래하던 일당이 독일에서 검거되었는데 그 자금이 유럽지역 북한공관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소형 어선이나 소형잠수함 등을 이용해 핵물질을 국내에 반입하여 핵테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2012.2.24).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내부행사로 인해 대남부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지만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이후 내부결속 차원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VOA, 2012.2.22).

따라서, 핵안보 정상회의 이전이든, 이후든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내부결속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50여개국 중 주요 20여개국이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로,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자생테러가 발생할 수 준까지의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제폭발물에 의한 유사테러의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치안전망 2012, 197~200면, 치안정책연구소)

어떤 세력이든 최근 뉴테러리즘의 경향에 따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고의 심리적 공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탄 또는 화생방테러가 제일 유력하게 예상되는 테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대응

지금까지 우리의 대테러 정책은 대테러부대를 중심으로 한, 테러범 진압과 사후 피해수습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9.11테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그 인적·물적 피해규모와 정신적 공황상태가 어마어마하다. 세계적으로 매년 3천여건의 테러로 1만명 가까이 사망하고, 2만여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의 진압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먼저, 국정원·FBI·인터폴 등 국내외 대테러 정보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북한 간첩, 위장탈북자를 가려내고, 국제테러분자의 국내유입이나 활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사제폭발물 원료물질이나 총기류가 불법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인터넷상의 불법거래와 제조법 게재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총기류에 대해서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는 모두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물품보관함 폐쇄, 투명비닐 쓰레기통으로의 교체, CCTV 증설 및 이동조치 등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개선하고,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 종료시까지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전과 같은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 전문부대에 최정예 인력을 특채하고 테러가 빈발하는 선진외국의 최고 전문가들과 대응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 8~9 일에는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미국·영국 등 해외 대테러 전문가 50여명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작전역량 강화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나 지난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면 무엇보다 혹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은 대테러 안전활동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나 테러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활동을 개시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노력과 대응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효과적인 테러예방 방안 모색

2010년 5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광장에서 한 노점상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신속하게 신고하여 차량폭탄을 제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정된 경찰자원을 시민들이 지원해 주어야 테러예방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시민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테러취약시설의 시설주와 보안관계자, 종사자들과의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우선 Hot-Line을 구성해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테러예방교실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테러예방 및 대응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테러범의 외양, 행동의 특징, 테러이용물질 등 식별요령과 대응행동요령에 대해 집중 교육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쉽게 테러예방과 대응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에 '테러예방교실' 스마트폰용 앱을 제작하였다. 스마트폰에서는 '앱' 검색에서 '테러'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http://cta.police.go.kr>)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해도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되어 있다. 인터넷 사이트 '캣이즈(<http://cateyes.us>)'에는 테러범과 조직의 특성, 그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아주 전문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시민들이 테러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테러신고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사이버경찰청, SNS,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 같이 경찰이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대테러 방어의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보다 더 넓은 층에 대해 깊은 지식의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은 이미 지난 G20 때에도 증명되었다. 지난 2009년의 폭발물 의심신고는 30여건에 불과했으나 G20이 있었던 2010년에는 5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중 G20 이전 20여일간 30건 가까이 신고하였다.

다른 치안분야와 마찬가지로 테러예방과 대응에 있어서도 시민은 치안의 공동생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테러 정보·대응조직을 구축하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테러범과 테러물질 바로 옆에서 그 발행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한 시민의 눈보다는 가까울 수 없다. 이제 시민이 대테러 안전 활동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경찰과 시민은 물론 유관기관 모두 잘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PSI**

■ 국내외 입법 및 판례 동향

2012. 1.~2.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223호, 2012. 1. 26. 일부개정
- 시행: 2012. 7. 27.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의 정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하고, ‘따돌림’의 정의 신설
 -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 (2012.1.26. 시행)
 -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337호, 2012. 2. 22. 제정
- 시행: 2012. 8. 23.
- 주요내용
 -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국가는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며,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287호, 2012. 2. 1. 일부개정
- 시행: 2012. 8. 2.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함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

국내 주요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660 결정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갑: 2003년 즈음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종합건설 본사 인근에서 계속 집회 개최, 청구인 주식회사 을: 2010. 10. 15.부터 11. 12.까지 서울 서초구 B대로 인도에서 C신문의 홍보와 가두판매를 위한 집회개최 신고.

· 2010. 11. 11.~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 국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장(피청구인)은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0. 10.경 코엑스 반경 1.1km 내지 2.1km 구역, 강남대로를 포함한 기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 위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2010. 11. 8.부터 12.까지 5일간 경호안전구역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함.

· 청구인 갑은 집회신고를 하려다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위 기간을 제외한 날에만 집회신고함. 청구인 주식회사 을은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기간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받음.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 결정요지(6:1 각하)

·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는 집회제한조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집회제한요청과 관할 경찰관서 장의 집회제한 조치에 따라 비로소 제한되는 것. 이 사건 공고에서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수 없음 (기본권침해가능성 부정).

· 경호안전구역 지정조항은 재량행위인 피청구인의 지정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 위 법률조항은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직접성 부정).

· 위 법률 부칙에서 정해 둔 유효기간의 종기가 도과함에 따라 집회제한조항이 실효. 지금 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현재의 기본권 제한에서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집회제한조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특별한 경호상의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행해진 1회적인 입법적 조치일 뿐이라서 앞으로 이와 동일한 입법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미 실효되어 있고 반복가능성도 없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해명으로써 향후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없음(심판의 이익 부정).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사건의 개요

· 갑은 2009. 11. 3. 00:30경 고양시 A동 소재 B 상가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켜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S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함.

· 경찰관 S는 갑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갑을 보호조치 대상으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C지구대로 데려옴.

· 경찰관들은 갑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 사이에 갑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불응함.

- 판결요지

· 경찰관이 C지구대로 보호조치된 갑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갑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함. 단, 갑에 대한 보호조치가 경직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파기환송).

외국 주요 판례(미국)

● U.S. v. Jones(2012. 1. 23. 결정)

- 사건개요

- 정부기관은 존스의 부인 소유 자동차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장치를 부착할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 영장의 발효장소는 워싱턴주, 유효기간은 10일이었는데, 수사기관은 매릴랜드 주에서 11일째 되는 날 GPS 장치를 부착하고, 28일간 자동차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 존스와 다른 사람은 마약밀매 공모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방법원은 존스의 주거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 획득한 GPS 데이터는 증거에서 배제하나, 자동차가 공공도로에 있는 동안에는 존스의 사생활을 보호할 만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워싱턴 D.C. 순회법원(항소)은 본 GPS장치를 사용하여 획득한 증거는 영장없이 획득한 것으로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

- 정부기관이 자동차에 GPS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파악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맞는 영장의 발부·집행이 행해져야 한다.

● Darin Ryburn v. George R. Huff (2012. 1. 23. 전원일치 결정)

- 사건개요

- 사건당사자: 버뱅크 경찰서의 라이번과 제페다 경찰관, 빈센트 허프의 부모인 조지 허프
-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빈센트 허프라는 동 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에 발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이번, 제페다를 비

롯한 4명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 학교장과 빈센트의 학급친구 2명을 면담한 경찰관은 빈센트가 이틀동안 학교를 결석하였고, 늘 따돌림을 당하여 왔으며 학교에 총기난사를 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왔다는 진술을 듣고, 빈센트가 총기난사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 두 경찰관은 빈센트의 모인 허프씨와 통화하여 빈센트가 모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허프씨는 주거지 안에 들어가려는 라이번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이번은 집안에 총이 있는지 물었는데, 허프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즉시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 때 두 경찰관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서 두려웠고, 함께 따라 들어가면 많은 경찰관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 잠시 후 허프씨는 두 경찰관의 진입을 허용하였고, 그 와중에 빈센트의 부가 방에 들어왔다. 경찰관들은 약 5-10분간 집안에 있었으나, 수색행위는 하지 않았다.

- 허프가족은 이후 경찰관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영장없이 가택에 들어왔다는 점을 항변하였다.

-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

-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판단할 때 경찰관이 허프가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안이 급박한’ 정황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총이 집에 있느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간 모의 행위와 학교장 및 빈센트의 학급친구들의 증언, 총기난사 협박편지, 이틀간의 결석 등은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성한다.

- 따라서 경찰관이 허프가의 주거지에 진입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황이 존재하므로 허프의 주장은 이유없다. **PSI**

201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개최

2012년 1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설악산에서 201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구소 발전방안 및 연구능력함양방안」에 대한 자유토론과 함께 각 실별 「12년 책임연구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고, 설악산 등반을 통해 연구소 직원들의 단합과 새해 소망을 기원하였다.



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12월말 정례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2012년 2월 2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축사에 이어 이백철 교수(경기대 사회과학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박재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배동인(교과부 학교폭력근절팀장), 유지웅(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치안전망 2012」 발간 및 배포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한광일 경무관)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경찰청 창설이래 처음으로 미래 치안환경을 전망하고 경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치안전망 2012」를 발간·배포하였다.

전망서는 총 4장(부록 주요 통계 포함), 약 370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적인 목차로는 제1장 2011년 치안활동의 회고,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 제3장 2012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2년 경찰의 대응을 담고 있으며 책자 전문을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계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교폭력의 현황 및 유형의 분석, 현행법상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치안현안에 대한 사회각층의 의견이 경찰청의 정책에 적시에 반영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경찰청 실무부서와 내·외

2012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제안 모집

우리 연구소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2012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위촉·용역)를 모집하였다. 모집분야는 정책기획, 사회안정, 안보대책, 생활안전대책, 교통대책, 범죄수사, 수사구조개혁 등 총 7개 분야로 총 20건의 제안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연구제안은 3월경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2012년 연구소 연구부 보직자 재편성

우리 연구소는 상반기 정기인사와 연구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연구소 연구부 보직자를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였다.

- ▶ 치안현안 대응팀 : 최경환(팀장), 이춘삼
- ▶ 연구토론회 : 최경환(팀장), 유지웅
- ▶ 치안전망서 편집팀 : 유동렬(팀장), 백병성, 최경환, 이상수, 이기수, 김남선, 김지환, 신동욱
- ▶ 치안정책 리뷰 편집팀 : 김현숙(팀장), 이춘삼, 권태형, 신동욱, 정웅
- ▶ 치안정책연구 편집팀 : 최경환, 김윤영(간사), 김용민
- ▶ 치안정책연구협의회 : 김학신(간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논문 공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2009년 12월 25일 선정된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 ▶ 공모 기간 : 2012. 3. 2(금) ~ 5. 1(화)
- ▶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 ▶ 논문 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 관련 분야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2년 1월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012년 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인터넷윤리 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SNS가 선거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2월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2012년 1월 1일, ‘한국ITS학회’ 이사로 선출되었다. 1월 11일에는 성남시에서 주최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활동을 하였으며 2월 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2월 23일에는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도 기본연구과제’ 심의위원으로 초빙되어 착수심의에 참여하였다.

연구소 인사

<전출>

조은순 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지난 1월 7일(토) 치러진 2012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경정에 합격하여 1월 27일 시행된 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장으로 발령되었다.

<전입>

신동욱 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업무지원 중 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연구소 생활안전대책실로 정식 발령되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